

# 정책브리프

Vol 24 | 2022. 4월

## Contents

I. 중소기업 주요 이슈	-----	1	III. 중소기업 정책연구	-----	5
II. 이슈진단	-----	2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		
글로벌 대변혁, 새 정부 소상공·자영업자 정책방향			IV.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	8
민간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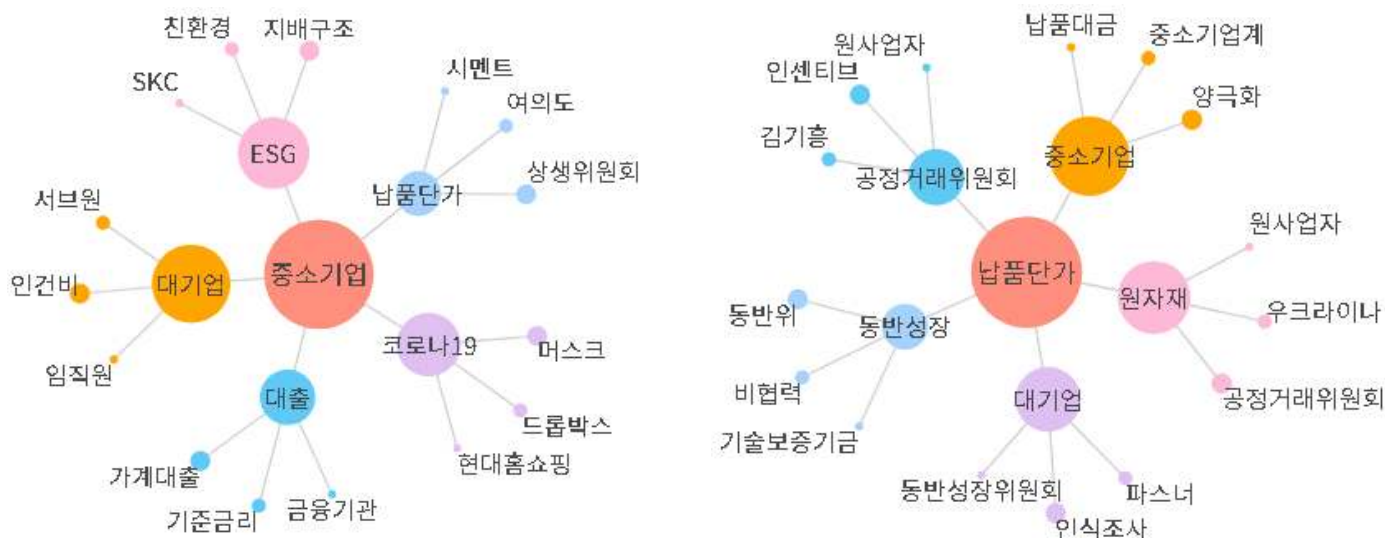
## [4월] 중소기업 주요 이슈

### 주요 키워드      중소기업



※ 4월 1~3주 언론에 등장한 중소기업관련 주요 키워드 (자료 :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통계청)

### 키워드 관계망      ①중소기업 / ②납품단가



※ 4월 1~3주 언론에 등장한 중소기업관련 주요 키워드 관계망 (자료 :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통계청)

## 글로벌 대변혁, 새 정부 소상공·자영업자 정책방향(1/2)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KBIZ정책연구단)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글로벌 대변혁의 도래와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 글로벌 대변혁의 근거는 첫째, Industry 4.0(이른바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생활 패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산업 생태계의 전환

우리나라는 뒤늦은 대응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해진 기후환경 탄소중립전략과 이에 따른 모든 개별 경제주체들의 철학과 행동변화

여기에 더해 그간 G2의 패권다툼을 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거진 신냉전체제의 도래 등임

-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국가역량 평가는 크게 의료·방역차원과 경제성장 차원 및 국민교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수립 필요

### II 한국경제가 당면한 도전과제

- 먼저 지난 4월14일 기준 인구 100만 명 당 누적 사망자는 396명이며 2년 치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계 평균의 1/4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총 감염자수는 1,597.9만 명으로 세계 8위 수준으로 뛰어올라 국민 불안감 급격히 상승

- GDP 성장률은 한국이 2020년 -0.9%성장(OECD 평균 -4.6%), 2021년 4.0%성장(평균 5.6% 추정)으로 OECD 회원국 차원에서 상위권인 가운데

2021년말 기준 1인당소득(GNI)도 최초로 \$35,168를 기록하였으나 OECD회원국 6위권 수준 소득불평등도를 감안하면 외형적 성과일 뿐임

- 한편, IMF가 조사·발표한('21.7) 주요국가의 GDP 대비 재량적 재정지출 추정치는 미국의 경우 '추가적 재정지출' 규모가 25.4%, '대출 등 유동성지원 비율' 2.4%이고,

일본 16.5%(28.3%), 영국 16.2%(16.7%) 등 20개 선진국그룹(AEs) 평균치는 각각 17.31%(11.40%)인 반면 한국은 4.5%(10.1%) 수준으로 집계

- 즉, 한국의 재량적 재정지출은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최소한의 재정지출 속에 코로나 치명률과 GDP성장률 수준에서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불평등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한국 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위기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차원에서 코로나19 고통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소상공자영업자와 실업자, 소기업 등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현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경기회복 둔화, 금리인상 추세 속에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임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9월 기준 약 887.5조원으로 전년대비 29.6%가 증가했고, 올 1월 기준 금융기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규모는 약 133.4조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사업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도래 등을 감안해야 함

## 글로벌 대변혁, 새 정부 소상공·자영업자 정책방향(2/2)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KBIZ정책연구단)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즉, 방역 및 의료체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시스템의 재구축과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확충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체계의 합리적 재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 III 새 정부 공약에 대한 평가

■ 이런 점에서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소상공자영업자 정책방향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의 대전환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 등이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와 정책방향을 권고하고자 함

■ 먼저, 국민의힘의 소상공자영업지원 공약(정책) 핵심은 ‘50조원~100조원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데 성공하였음.

즉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희망지원금으로 최대 43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최대 5,000만원 지급, 세금·공과금·임대료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민관합동 팬데믹 극복 특별기금 5조원 조성,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관련 정책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 ‘임대료 나눔제’ 도입, 기존 정부지원 안과 별개로 ‘600만원 추가지원 및 실질적 보상’ 약속 등임

■ 공약 내용을 분류해 보면, 첫째, 기존손실보상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추가지원, 둘째, 현재 및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에 필요한 정책과제, 셋째, 금융지원 정책 중심으로 소상공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요구와는 차이가 있는 공약과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 IV 새 정부 정책방향 제안

■ 경제와 산업의 생태계 변화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획기적인 추세전환 또는 발전의 경로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 정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자영업자 비중이 약 24%로 상위수준에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첫째, 소상공자영업영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과 이 영역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둘째, 부채경감 및 탕감을 통한 사업자의 신용도 유지와 특히 인플레이션 최소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며

셋째, 여전히 채무일 수밖에 없는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정책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정책, 예컨대 국가예산을 동원한 보증채무의 국가매입과 같은 방식에 무게를 두어야 하고

넷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위기 시 소상공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대출금을 탕감해줌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고통을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생을 유지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다섯째, 생태계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경제주체들, 특히 창의성이 강한 개인들이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민간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정책방향(1/2)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KBIZ정책연구단장)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기술혁신역량 확보의 중요성

- 글로벌 경기침체, 신흥국 경제성장률 하락,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으며,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도 경제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임

산업의 경계가 재구획되고 있고, 플랫폼 경제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비즈니스의 기본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기술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음

### II 새 정부 경제정책 :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되고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하며, 진정한 성장은 오로지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함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딜레마와 기존 추격자형 성장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여 탄탄하고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나아가야만 하며, 기술혁신주도형 성장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혁신국가를 구현해야함

### III 새 정부 공약에 대한 평가

- 민간중심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즉, 개별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스스로 펼칠 때 정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의미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비용 일부를 매칭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R&D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민간의 자발적 혁신을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짐

- 한편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규제혁신, 기술금융과 세액공제 확대,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은 모두 시장친화적 제도개혁과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들로 향후 더욱 확대가 바람직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현행 25%인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간 혁신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산업간 상생 및 역동적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혁신성장의 열쇠로, 무엇보다 규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민간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정책방향(2/2)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KBIZ정책연구단장)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기업혁신을 방해하는 산업화 시대의 잘못된 관행의 대전환이 요구됨. 일례로, 민간금융권의 회사대표 연대보증은 재창업 장애요인으로, 1960년대 이후 아직까지 살아있는 ‘관행규제’의 전형임

또한 민간의 혁신성장은 ‘스케일업’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으며 정부는 스타트업과 기존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스케일업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른바 「스타트업 333」 정책을 추진하여 3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지역 거점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대학, 출연연구기관, 민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Open Scale-up Platform」을 구축하여 대학 교원, 연구인력, 창업 희망자의 창업 및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주목할 만함

시대적 화두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의 견지가 필요한데, 기업주도의 친환경 공정 전환과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SG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기업의 친환경 제품개발 및 탄소제로·청정·순환경제를 위한 기술자문, 기술이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탄소 및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세금감면 등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유의미함

### IV 민간중심 혁신성장을 위한 새 정부 R&D 정책방향

- 새 정부 혁신정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함

- 우선 정부는 기업 스스로 R&D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환비용에 대해 R&D 투자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천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질의 인력 부족으로, 청년 R&D 인력의 양성과 경험 많은 중장년층 엔지니어들의 직업전환에 정부 산업인력정책의 방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특히 DNA(Data, Network, AI), 바이오, 블록체인, 메타버스, 첨단 제조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분야에서 미래 10년을 이끌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

### V 중소기업도 적극적 R&D 추진 필요

- 한편 기업의 자체 R&D 전략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중소기업들도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필요한 R&D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당장 어렵다고 해서 전환성장이라는 큰 흐름에 소홀히 대응하면 어느 순간 한계기업으로 전락 우려

- 다행히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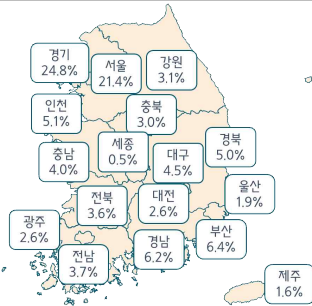
KBIZ중소기업연구소 김은하 연구위원

※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기반

- 중소기업은 전국 기업체 689만개의 99.9%, 종사자는 2,108만 명 중 1,744만 명으로 82.7%
- 전국 중소기업의 51.3%가 수도권에 위치
  - \* 경기 24.8%, 서울 21.4%, 인천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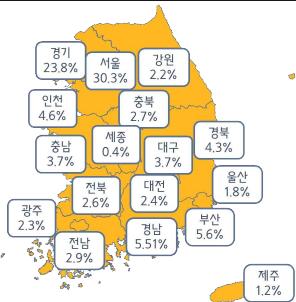
####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분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

-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58.7%가 수도권에서 근무
  - \* 서울 30.3%, 경기 23.8%, 인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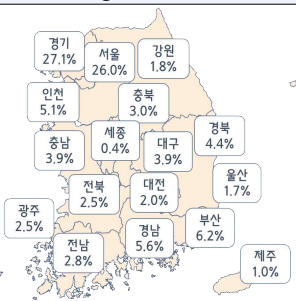
####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 분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 중소기업의 매출은 전체의 48.7%를 차지

####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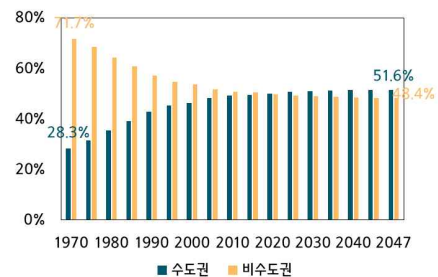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19년 기준)

### II 지역소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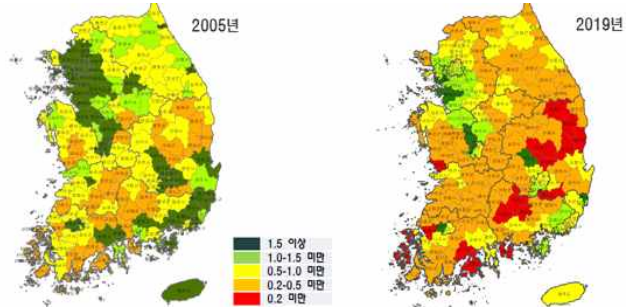
- 1960년대 이후 꾸준한 도시화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중 46.9%가 소멸위기에 처함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1970-2047)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9년 기준 한국의 지역소멸위험 현황



출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11.14.)

-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 높음
- \*\* 소멸위험지역: 85곳(17년)→106곳(21년)
- 생산에 중요한 인구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노화가 진행 중
  - 핵심노동연령대(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1%p 상승 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 인구 감소보다 지역 경제 붕괴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음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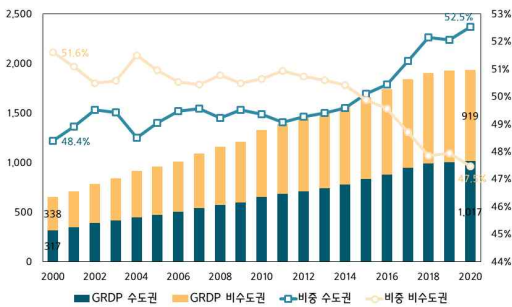
KBIZ중소기업연구소 김은하 연구위원

※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II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경제 양극화 심화

-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00년 비수도권이 더 많은 51.6%를 차지했으나, 2015년 역전된 후 수도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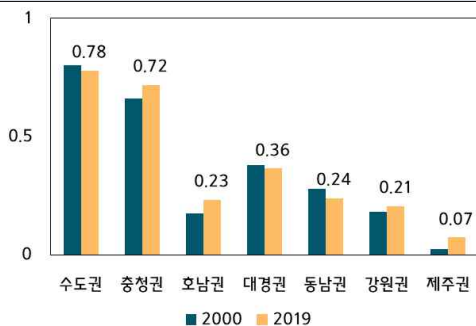
지역내 총생산 및 비중 추이 (2000-2020), 단위 : 조원,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지역소득」

- 2020년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은 2,121만원으로 수도권은 평균 2,211만원, 비수도권은 2,030만원
  - 2021년 4월 기준, 지역별 월평균 임금은 최저 307만원 (제주)부터 최고 445만원 (서울)까지 1.4배 차이가 남
- 지역기업의 혁신 역량의 격차도 벌어져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R&D인력은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1.6배로, 2000~2019년 사이 연평균증감률은 수도권이 4.8%, 비수도권은 4.3%로 수도권에서 더 빠르게 성장
- 지역혁신지수는 지난 20년간 비수도권이 하위권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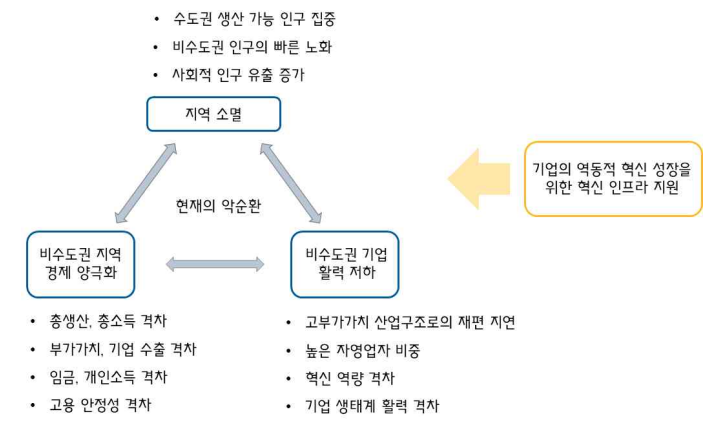
지역혁신지수 (종합혁신지수 기준)



출처 : 산업연구원

### IV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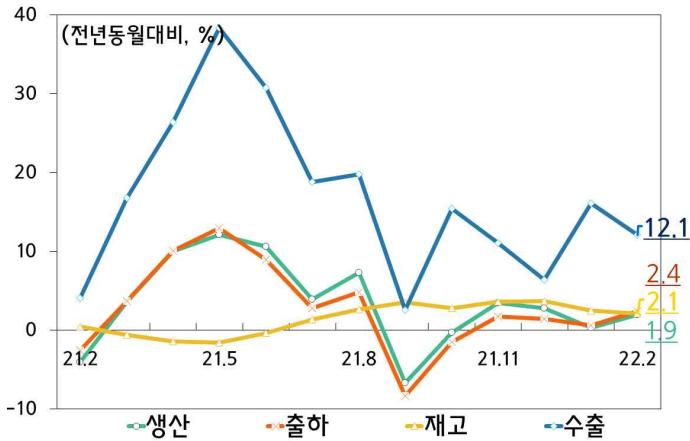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 구도를 전제로 하며, 경제적, 물리적 자본의 격차가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격차까지 초래
  - 이런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한국 경제 전체 성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성장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중요
-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지방 인력의 유출을 막고 지역 간 소득 격차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하는 것은 결국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혁신 주체인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
- 지역소멸-경제 양극화-기업 활력 저하의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는 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인프라 지원 필요



-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가 최우선 과제
- 산업안전 대응역량 강화, 주52시간제도 안착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 조직화와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업 촉진 노력이 필요

## 2월 동향

수출	생산	출하	재고



자료: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 ■ '22년 2월 中企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 '21년 266억 달러를 재경신

\* 역대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1위) 315('21.4Q) (2위) 304('22.1Q) (3위) 287('20.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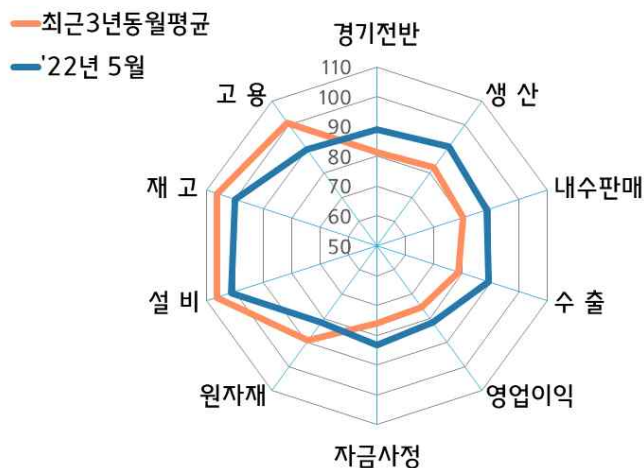
- 10대 품목 중 화장품 제외 모두 증가했으며, 의약품, 반도체, 기타기계류 등 7개 품목은 역대 1분기 최고 실적

### ■ '22년 2월 중소기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3%로 3개월 연속 하락세

## 5월 전망

경기전반	생산	내수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설비	재고	고용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 '22년 5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7.6으로 전월대비 2.9p 상승해 '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고치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4.18) 및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中企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

-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中企 지속적으로 증가  
\* 원자재가격상승 경영어로 추이 : 15.7%('20.4) → 33.7%('21.4) → 52.0%('22.4)

###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